‘김건희 문자·제2 연판장’ … 與 전당대회 공방 격화

일부 원외인사, 한동훈 사퇴 요구
한 “구태 극복… 국민·당원과 변화”
선관위 “당내 화합 저해행위” 제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지난 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날부터 자신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고 다니는 것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께서 똑똑히 보게 하자”며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제2 연판장 사태’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초선 의원 53명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후보를 낙마시킨 ‘연판장 사태’에 빗댄 것이다.

한 후보는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게 하자. 당원 동지,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부터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한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동훈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며 “더 기막힌 건 선관위원과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분도 이런 불법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연루됐던 선관위 소속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선관위 차원에서 주의·경고를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34조 3호는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원희룡 후보 측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해당 문자가 ‘후보자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5·18 왜곡 강민수 국세청장 지명 철회” 촉구

“석사논문에 ‘광주사태’ 표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강민수(사진)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통해 12·12군사반란을 ‘거사’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헌정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자 전두환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하고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는 미화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짓밟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강 후보자가 편향된 역사인식에 사로잡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5·18을 왜곡·폄훼한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파동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낙마를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또 다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사를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더이상 5·18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하고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최권범 기자

민주 “국힘 전대 김건희 개입, ‘막장드라마’”

“문자 하나에 진실공방, 기막혀”
“당장 특검 수용하라” 압박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전을 두고 “김 여사 개입으로 여당 전당대회가 단숨에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상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며 “진짜 문제는 뒤로 하고 서로 문자 하나에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기막힌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을 수수해놓고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뒤에 숨어 있다. 그런데도 수사가 아니라, 사과 논쟁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과했으면 됐다’는 교언영색으로 김 여사의 곁가지만 정리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뭉개준 사람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닌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 선봉장 역할을 맡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사과 시즌2”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 김 여사 방탄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처참한 인식만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과 논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생각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 친목질도 감당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까지 ‘내게도 힘이 있다’며 전당대회를 또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내를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꼴”이라며 “영부인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국민의힘에 어떤 당직도 없는 만큼 당무 개입을 멈춰야 한다”며 “김 여사 방탄 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는 당무 개입 논란도 나 몰라라 손수 간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120만 명이 훌쩍 넘은 대통령 탄핵 청원의 뜻을 제발 헤아리길 바란다”며 “갈 데 안 갈 데 못 가리는 갈지자 행보는 탄핵 청원 대기자의 수만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3타경 1753	1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31-1 387㎡	대	231,127,000	일괄매각.목록1및 타지상타인소유주택소재한다고추정
		완도군 보길면 예송로 264-34 주차장및창고 1층175.5㎡ 2층96.5㎡[물건번호1: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주택	231,127,000	
2023타경 53792	1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220-296 단층 76㎡ 부속건물 단층 창고42.75㎡ 보일러실6.44㎡	단독주택	83,400,300	일괄매각.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932-2 660㎡[물건번호1:지상식재된수목매각포함]	대	83,400,300	
2023타경 53945	1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43-23 단층 농어촌민박시설98.28㎡	단독주택	240,497,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다용도실]포함.지상소재조경수,수목,조경석및정자매각포함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834-3 105㎡	대	240,497,600	
		동소 840 321㎡	대		
		동소 840-7 234㎡ 제시외 정자9㎡ 정원수등1식	대		
[기타]					
2023타경 53792	3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산109 633㎡[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목장용지	2,911,800	연고자미상분묘수기소재
	4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산104 11603㎡[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목장용지	18,564,800	
	5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932-5 3206㎡	목장용지	247,438,000	일괄매각.목록6~8부동산은도로로이용중.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동소 932-9 247㎡	목장용지		
		동소 932-10 311㎡	목장용지		
		동소 936-6 212㎡	임야		
		동소 936-4 838㎡	임야		
		동소 932-8 1134㎡	목장용지		
		동소 산110-4 771㎡	목장용지		
		동소 932-7 445㎡	목장용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2023타경 53792	5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940 1021㎡	목장용지		
		동소 산110 2385㎡	목장용지		
	6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929-4 770㎡	목장용지	167,680,000	일괄매각.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동소 929-2 928㎡	목장용지	167,680,000	
		동소 929-9 485㎡	목장용지		
		동소 산99 932㎡	목장용지		
		동소 929-7 52㎡	목장용지		
		동소 929-5 116㎡	목장용지		
		동소 929-6 68㎡	목장용지		
		동소 929-8 311㎡	목장용지		
		동소 929-1 3831㎡	목장용지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53648	1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016 1008㎡	전	7,660,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묵전
				7,660,800	
	2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086 347㎡[위지상및타지상매각제외타인소유창고소재.매각대상토지위식재된타인소유수목매각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533,100	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2,533,100	
	3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098-2 169㎡[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대	4,056,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창고,숙소]있음
				4,056,000	
2023타경 53761	1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609-1 787㎡	전	14,95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묵전
				14,953,000	
2023타경 53792	2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938-2 1199㎡	전	42,46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938 622㎡[물건번호2: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전	42,460,000	
2023타경 53808	1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417-4 2499㎡	전	32,48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2,487,000	
	2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76-1 33658㎡[인접토지와경계상소유자미상철파이프하우스소재,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불도확인요]	임야	80,779,200	일부분묘조성부지,분묘수기소재,현황도로등으로이용중
				80,779,200	
2023타경 53860	1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32-1 309㎡[인접토지와경계등불명해경계측량등확인요]	대	7,416,000	타인소유주택,창고등소재,폐가상태
				7,416,000	
2023타경 53877	1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산106 29653㎡	임야	41,514,200	지상소재분묘약4기로추정,맹지
				41,514,200	
2023타경 53945	2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840-1 697㎡ 제시외 수목등1식[지상식재된유실수등매각포함]	전	30,07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0,074,000	
2023타경 53983	1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219-1 111㎡[지상매각제외주택[건축물대장부존재],창고소재]	대	2,775,000	
				2,775,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7. 22.[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7. 29.[월] 14:00
4. 매각장소 : 해남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박주용